

2024. 7. 17.(수) 14:00

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

『AI 개발·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』

Q&A



개인정보보호위원회

## 1. 안내서가 적용되는 '공개된 개인정보'가 무엇인지?

- 본 안내서의 대상인 '공개된 개인정보'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로서,
  - 주로 웹사이트, 블로그, 위키백과, 커먼크롤, 법령에 의해 공시·공개된 개인정보, 출판물, 방송매체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을 의미
  - 비공개 또는 일부에게만 공개된 정보, 사인간의 대화 등은 공개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
- 현재 많은 국내외 AI 기업 등이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웹 스크래핑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음

2. 실수로 카드번호, 고유식별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을 수 있는데, 이러한 정보가 활용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?

- 공개된 데이터에는 위법하거나 실수로 공개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일정한 안전조치가 필요함
- 개인정보위와 KISA는 공공·민간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 번호 등 보호법상 노출이 금지된 개인정보의 노출 및 불법적 유통을 탐지하여 삭제하고 있으며,
  - 탐지된 사이트의 URL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AI 기업 등에게 공개하고 있는데, 기업은 해당 사이트를 학습 데이터에서 배제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
- 아울러, 「안내서」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\*를 안내했으니 기업들은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음

\* △ 특정인 개인정보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프롬프트 필터링 적용,  
△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사전 비식별화 등

3. 기업 입장에서는 안내서에 제시된 여러 안전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, 이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은?

- 기업에게 본 안내서에서 제시된 모든 안전조치의 도입과 이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(안내서에도 명시함)
  - 기업이 AI 유형, 용례 등 개별 여건에 따라 AI 성능과 안전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부담은 없도록 함
- 또한, 안내서는 AI 학습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·활용할 수 있는 기준·요건을 명확히 안내하였기에 기업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을 것임
  -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주요 기업들은 이미 일정한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지만, 안내서를 통해 기업·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안전조치를 안내받음으로써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

4. 「안내서」에 열거된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미이행하면 AI 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?

- 본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개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님
  - 다만, 사업자가 예상할 수 있거나 실존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 중대한 정보주체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,
  - ‘정당한 이익’을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로 주장하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못할 수 있음
- 안내서의 목적이 조사나 제재가 아니라 AI 기업 등의 불확실성 해소에 있는 만큼,
  - 안내서 발간 이후에 주요 AI 기업과 소통하면서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

5. AI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 정보를 처리하면, 이를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지?

-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부담함
- 정당한 이익을 원용하는 AI 기업은 안내서에 제시된 판단기준 및 적용사례를 참고하여 적법근거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권장됨

6.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의 최적조합을 검토·도입하라는 것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닌지?

- AI는 기술·서비스 구조, 적용 분야, 목적 등이 다양하고, 발전 양상이 매우 변화무쌍한 기술임
  - 현재 AI의 성능을 발전시키면서도 공정성, 투명성, 안전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으나, 아직까지 '만능 해결책'으로서의 안전조치는 알려진 바 없음
  -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개별 조치는 편향·차별, 성능 저하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어, 특정 안전 조치 이행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기업 자율로 「최적 조합」을 선택하여 이행하도록 함
- 단, 기업 입장에서는 「최적 조합」 판단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,
  - 이번 안내서에 실제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했고, 향후에도 AI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연구·시행되고 있는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안내서에 반영할 계획임

7. 안내서로 인하여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에 차별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?

- 동 안내서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안내서로 인한 국내외 기업간 차별 우려는 없음
- 또한,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안내서에 반영하였음

< 안내서 적용 대상 해외사업자 >

- ①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·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- ②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,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

※ 「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」 참고



8. 다른 경우에도 '정당한 이익' 조항을 근거로 개인 정보 활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?

- 그간 국내 정당한 이익 조항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고, 아직까지 관련 판례나 위원회 결정 사례는 많지 않음
  - 기존 사례를 보면, 다양한 안전조치를 통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낮춘 경우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었음
  - 안내서는 AI 개발·서비스에 한하여 '정당한 이익' 조항을 적용하는 기준으로, 기존 사례와 비슷한 맥락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함

9. 공개된 개인정보로 학습된 AI가 특정인을 식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거나,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?

- 개인식별 목적으로 사용되어 범죄 등에 악용되는 AI의 경우에는 '정보주체의 권리'에 우선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'정당한 이익'이 원칙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
  - 안내서에도 ①안면인식 DB와 결합하여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 및 감시 목적의 AI 개발, ②사이버 공격이나 피싱·스미싱 등 개인 사칭 사기 목적의 AI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안내함
- 참고로,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여 오픈소스로 공개된 AI 모델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, 여러 AI 기업에서는 안전하고 책임있는 AI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정책을 마련·시행하고 있음
  - AI 개발자-배포자-이용사업자 등 간의 책임분담과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